

#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곳곳에 하점, 민간 자율 방역시스템 구축해야!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조성하여 민간자율로 방역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양돈 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정부 주도로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는 홍보나 교육만을 담당한다는 계획은 실제 접종사업에 '비상대책본부' 가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정확한 예방접종 실태 파악을 신속히 마치고 곧바로 모든 역량을 백신 접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완구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돼지콜레라 방역 실패하면 3조7천억원 피해 발생

**현** 재 일본은 '93년 이후 현재까지 자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고 2000년 10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한 후 6개월 정도 관찰한 뒤 2001년 4월 비발생(청정지역)을 선언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1년 4월에 우리도 비발생 선언을 하지 못할 경우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98년 8만8천톤, 3억1,300만 불)이 중단되어 2001년 국내 양돈산업에 3조7천억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돼지는 물론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등(현재까지 협상 진행 중) 일본의 돼지콜레라 비발생 선언과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중단이 언제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96년 39건(4,498두), '97년 20건(1,912두), '98년 6건(985두)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최근('99년 2월말~3월초)에도 경기도 용인(포곡면, 백암면)에서 4건(1,553두)의 돼지콜

레라가 발생하여 과연 2000년에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2001년에 청정화를 선언할 수 있을지 지극히 불안한 상황이다.

### 항체 검사된 농가, 전체 사육농가의 35.6%에 불과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항체 검사는 대규모 사육농가와 소규모 사육농가가 구분되어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전체 사육농가의 일부만이 검사되어 정확한 돼지콜레라 방역실태 파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99년 1월~5월 수의과학검역원의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83.2%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돼지 사육농가의 35.6%(22,269호 중 7,922농가)만이 검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99년 5월의 경우 3,538농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중복 검사된 농가가 39%(1,376농가)에 이르러 실제 검사가 이루어진 농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 일부 지역 검사실적 지극히 저조, 양성률 의미 없어

더구나 항체검사 실적이 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사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도의 경우 현재의 항체양성률이 돼지콜레라 방역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경우 12.2%의 농가만이 검사되어 78.5%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18.1%의 농가만이 검사되어 84.9%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내고 있고, 충청북도는 28.1% 검사에 78.5% 양성률, 충청남도는 30.6% 검사에 84.8%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 소규모 농가의 사육실태 파악조차 안돼 있어

더구나 수의과학검역원이 각 시·군의 행정망을 통해 사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육농가에 대한 파악만 이루어지고 정확한 사육두수는 아예 기재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돼지콜레라 방역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육농가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할 대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 43%의 농가가 아직도 접종 않거나 1회만 접종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에서 '99년 3월~5월 23일까지 10,877호의 농가를 방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돼지콜레라근절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66.1%가 '상'으로 분류돼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13.3%의 농가는 아예 예방접종조차 않고 있으며, 29.4%의 농가가 1회 예방접종에 그치고 있어 43%의 농가가 접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조차 없는 도축장 많아

경기도의 경우 '99년 3월 관내 29개 도축장에 대한 시설 점검 결과 9개소가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강원도의 경우 16개 도축장 중 4개소, 충남의 경우 11개 도축장 중 4개소, 전남의 경우 10개 도축장 중 4개소, 경남의 경우 13개 도축장

중 3개소가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가축수송차량에 의한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 도축제한조치는 '가짜 자가접종 증명서'에 무방비 상태

농림부는 6월 14일부터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돼지는 도축을 제한(항체검사 후 접종을 안한 것으로 밝혀지면 7월 1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나 자가접종 증명서(기타 공동 방역사업단, 가축위생시험소,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경우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어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돼지의 도축제한 조치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기금조성 수포로 돌아가

한편, 지난 4월 15일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양돈협회 등을 중심으로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를 결성하고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사료가격에 0.5%를 부과하여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 하기로 하였으나 사료업계의 비협조로 무산되는 한편, 농림부에서는 100두 미

만의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 '시·군별 예방접종반'을 구성해 정부 예산(19억6천만원)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민간자율의 돼지콜레라 방역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 민간중심의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해야

현재 돼지콜레라 박멸은 우리 농업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돼지콜레라 방역 대책은 곳곳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조성하여 민간자율로 방역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양돈 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정부 주도로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는 홍보나 교육만을 담당한다는 계획은 실제 접종사업에 '비상대책본부'가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정확한 예방접종 실태 파악을 신속히 마치고 곧바로 모든 역량을 백신 접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기회로 앞으로 완벽한 가축전염병 예방이 가능한 민간자율의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양돈**

## 본지 캠페인

#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